

## 월츠(Kenneth N. Waltz)의 핵확산 안정론과 북한 핵 문제\*

황지환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이 글은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을 논리적, 경험적으로 재검토하고 한반도에서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핵무기가 확산되었을 때 세계질서가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는 월츠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1) 국가성향, 2) 전쟁부재 요인, 3) 군사적 충돌의 양상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핵확산 안정론은 모순이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적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선 북한의 현상타파적 전략은 핵무기의 위험성을 높여주었다. 또한 핵무기는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감소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남북한 군사균형이 전쟁부재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개발 이후 한반도에서 국지적 무력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월츠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제어:** 월츠, 핵확산, 안정, 북한, 한반도

---

\* 이 논문은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I. 서론: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

2013년 사망한 케네스 월츠(Kenneth N. Waltz)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책인 ‘국제정치이론(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을 저술했다(Waltz, 1979). 이 책을 통해 월츠는 과학적 이론으로서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국제정치이론을 정립하였다. 이후 그의 이론은 국제정치학계 안팎에서 수많은 논쟁을 유도하며 국제정치이론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국제정치이론이 월츠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수 있다고 언급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다(이근욱, 2009). 월츠는 국제정치이론가였지만 현실 국제정치에도 큰 관심을 보였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다. 특히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그의 핵확산 안정론은 국제정치학계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국제 비확산레짐(nonproliferation regime)에서 커다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가 1981년 발표한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는 냉전기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던 국제 비확산레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Waltz, 1981). 그의 글은 후에 스콧 세이건(Scott D. Sagan)의 “More Will Be Worse”와 짝을 이루며 그들의 공동저작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Sagan and Waltz, 2002). 월츠는 또한 미국정치학회보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핵억지(nuclear deterrence)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존의 주장들을 비판하고 핵무기의 전략적 의미를 재조명하기도 했다(Waltz, 1990).

핵무기에 대한 월츠의 핵심주장은 핵무기의 확산(spread)이 세계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핵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두려움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상대국을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이 자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지(deter)하는데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핵억지 논리를 강조한다.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들이 예방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심각한 핵무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세이건과는 달리(Sagan, 2002), 월츠는

핵무기 확산이 세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은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핵균형을 통해 잘 설명되었다. 월츠는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이 서로에 대한 전쟁을 감행하지 못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한 것이 핵무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냉전기 간 동안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에 의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통해 서로를 억지함으로써 평화를 달성했다고 한다. 핵무기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고려할 때 핵무기 보유국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도록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핵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핵전쟁에서의 승리는 무의미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유인이 강해질 수 있다. 핵무기가 제공하는 이른바 ‘2차공격력(second-strike capability)’은 핵전쟁을 재래식 전쟁과 구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선제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도 파괴되지 않은 핵무기를 통해 상대방을 궤멸시킬 수 있는 2차적 보복공격 능력을 가진다는 핵전쟁의 속성은 재래식 전쟁과 구별된다. 따라서 핵무기 보유국들은 이전보다 군사력 사용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핵무기의 확산은 더 많은 국가들이 상대국에 대해 더욱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할 것이므로 세계질서가 더욱 안정되고 평화로워지게 될 것이라고 월츠는 주장한다.

이러한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은 한반도에서 적실성을 가지는가? 비록 이론적으로는 강력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핵확산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 핵문제고민해 온 한반도에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성공한 뒤 2017년까지 10여 년 동안 6번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가? 월츠의 주장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핵균형 달성을 통해 한반도를 더욱 안정된 질서로 만들 것인가?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s state)’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는 한국 정부에게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은 그리 유쾌하지 못한 주장임에 틀림없다. 이 글은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이 한반도에서 경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한다.

## II.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월츠의 시각

### 1. 이란 핵 프로그램 및 중동의 핵균형에 대한 월츠의 고별사

월츠는 2013년 사망하기 1년 전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마지막 글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며 그의 핵확산안정론 논쟁을 계속 이어갔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비난하고 있을 때 월츠는 “Why Iran Should Get the Bomb”이라는 매우 도발적인 글을 게재하며 자신의 기존 주장을 분명히 했다 (Waltz, 2012).

이란 핵보유에 대한 월츠의 생각은 철저하게 핵억지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매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논지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가 중동지역의 안정에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란 지도부가 비이성적이며 도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 왔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시도는 중동지역에서 타국을 공격하여 정복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국을 보호하려는 안보 욕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란 역시 다른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평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월츠는 예상했다.

국제사회는 대체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가 중동의 화약고인 이스라엘-이란 충돌을 촉발시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월츠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야 말로 중동지역의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츠는 현재 중동지역의 만성적인 긴장상태가 이스라엘의 핵보유로 인해 지역 내 핵균형이 무너진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본 것이었다. 따라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중동지역의 핵균형을 달성하게 되어 지역 내 불안정 요인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자국의 안보를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반세기동안 중동지역의 핵무기를 독점함으로써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 되어 왔다고 해석하였다.

지역안보 차원에서 보면 유럽이나 남아시아 등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핵독점을 이루고 있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만이 지역 내 핵독점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중동질서가 그동안 불안정하고 위기가 반복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힘은 견제받고 균형되어야 하는데,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이 오랫동안 부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결국, 월츠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 노력으로 인해 새로운 중동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불안정과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는 시각을 보여 준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노력은 이스라엘이 그랬듯 상대국에 대한 공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억지력 강화 차원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월츠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가 중동지역에서 핵보유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했다. 1945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이후 70여 년 동안 핵무기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1970년대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출범과 함께 국제 비확산체제가 강화되면서 핵확산 속도가 급감했으며, 이 경향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월츠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가 핵무기 보유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핵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과장되어 왔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월츠의 예상과는 달리 이란 핵 문제는 2015년 7월 이란과 주요 6개국(P5+1: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의 합의로 타결되었다. 이란 핵 위기는 2002년 8월 비밀 핵 프로그램이 공개된 후 13년간 제재와 협상을 반복하며 고조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가동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이란과 국제사회가 합의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었다(연합뉴스, 2015/07/14). 물론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Geneva Agreed Framework)나 2005년의 9.19 공동성명과 같은 북핵 문제의 여러 합의가 붕

괴되었던 것처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도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황지환, 2016).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잘못된 합의였다고 비판하여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Landler and Sanger, 2017). 월츠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란 핵 합의를 비판하고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을 것이다. 중동에서 이란의 생존 및 전략적 입지와 직접 연결된 핵 프로그램을 경제제재나 합의로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이란이 경제제재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이스라엘과의 긴장관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쟁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에서 안보위협을 가진 이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스라엘 핵과 이란 핵의 균형이 중동지역에서 이루어질 때 역내 평화와 안정이 달성될 수 있다는 핵확산 안정론은 월츠 사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 2. 북한의 핵개발과 동아시아 핵균형에 대한 월츠의 시각

월츠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북한 핵무기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라(Don't Worry Too Much Abou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는 논문을 쓰기도 했다(Adams and Waltz, 1994; Waltz, 1995). 월츠는 세이건과 공동저작한 책 ‘핵무기의 확산(The Spread of Nuclear Weapons)’의 1장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으며,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북한의 핵 보유가 그리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Waltz, 2002). 월츠는 1945년 이후 어떠한 국가도 핵무기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말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고 해도 북한은 핵개발 노력을 위장하고 핵무기를 숨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북한은 월츠의 예측대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핵실험에 성공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1994년의 제네바 합의(Geneva Agreed Framework)로 기존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우라늄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

발시켜 왔다(황지환, 2006). 북미 간에 충돌이 생긴 2003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진행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었고 2017년 9월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발전시켜 나갔다. 월츠의 주장과는 달리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아르헨티나 등의 사례처럼 핵무장 노력이 무산된 국가들도 존재한다(Paul, 2000). 하지만, 북한처럼 자국이 약하고 고립되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노력을 포기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의 핵보유 시 우려되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월츠는 회의적이다(Waltz, 2002). 월츠는 핵무기가 역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증명된 적이 없으며, 북한과 같은 약소국이 핵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라는 주장도 근거 없다고 비판한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는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북한에게도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은 커다란 위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50년의 한국 전쟁 역시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이 인식한 후에 발생했다는 것이 월츠의 설명이다.

북한 지도자와 정권의 대외적 성향에 대해서도 월츠는 비판적이지 않았다. 김일성이 히틀러나 스탈린과 종종 비교되곤 했지만, 북한의 능력은 히틀러의 독일이나 스탈린의 소련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소련과 중국이 그랬듯,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rogue states)도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월츠는 “어떤 국가가 약할수록, 그리고 더 큰 위협에 처해 있을수록 그 국가가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진다”며, “북한의 행태는 때로는 추악하기는 했지만 결코 무모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극단적인 테러그룹과는 달리 북한 정권이 자살 충돌의 성향을 나타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억지하지 못한다면, 북한 역시 미국의 핵무기를 억지할 수 없다는 논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들의 조심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핵보유가 촉발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연쇄적인 핵확산에 대해서도 월츠는 비판적이지 않았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적대적인

쌍(hostile pairs)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능력은 소련의 핵능력을, 소련은 중국을, 중국은 인도를, 인도는 파키스탄의 핵능력을 결과했다(Waltz, 2002).” 동북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핵무장이 북한의 핵무장 때문에 촉발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미국의 확장역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쟁은 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동아시아의 연쇄적인 핵확산 자체가 지역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이다. 특히 억지와 방어 능력이 향상되면서 전쟁 가능성은 감소했다고 이해된다. 핵무기는 전쟁 발발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핵무기의 점진적 확산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월츠는 경제제재를 통해 핵무기 보유 노력을 억지하려는 노력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북한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해 준다고 주장했다(Waltz, 2012). 경제제재의 강화는 핵무기 보유 노력을 좌절시키기 보다는 핵억지력 확보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월츠는 예상했다.

### III.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은 논리적, 경험적으로 옳은가?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은 논리적, 경험적으로 옳은가? 핵무기가 확산되었을 때 세계질서는 실제로 더욱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는가? 월츠의 설명대로 1945년 이후 핵무기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핵무기로 인한 전쟁이 발발하지도 않았다.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이 등장할 때마다 핵확산과 세계질서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핵무기는 쉽사리 확산되지 않았고 평화의 질서가 붕괴되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긴 평화(long peace)’를 유지했고(Gaddis, 1989), 소련과 중국 역시 195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분쟁과 군사적 충돌에서도 핵전쟁을 회피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호간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약에 서명하며 서로에 대해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라운도, 2010). 월츠는 이처럼 1945년 이후의 역사가 핵억



지 및 핵확산 안정론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들은 다른 강대국들의 집중 타깃이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호전성을 감소시키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상대방을 정복하려는 공격적인(offensive) 의도에서가 아니라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defensive) 의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란의 핵 보유 역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억지를 강화시킴으로써 양국사이의 전면전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 중동지역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가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월츠의 핵억지론과 핵확산 안정론이 논리적, 경험적으로 옳은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1. 국가성향: 현상유지국가 대 현상타파국가

우선 월츠의 주장은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안보를 추구하는 현상유지국가(status-quo state)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무정부(international anarchy) 상태에서 모든 국가는 안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고 가정된다. 월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의 일반적인 행동방식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이란이나 북한은 태생적으로 비합리적(innately irrational)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미친(mad) 행위자들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생존과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매우 합리적인(rational) 행위자들이라는 인식을 가진다. 지도자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핵억지 논리가 이란이나 북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합리적인 행위자로 인식하면 이란과 북한에도 현상유지국가의 가정을 통해 핵억지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합리성을 전제하더라도 이론적으로 현상타파국가(revisionist state)의 가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 논리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생존과 안보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영토 확장이나 세력팽창과 같은 현상타파 목표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Schweller, 1994/96). 1930년대 히틀러 집권이후의 독일은 안보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격적으로 행동한 대표적인 현상타파국가였다(이근욱, 2009: 99-102). 결국 국가성향에 대한 월츠의 사고는 모든 국가를 현상유지국가로 보기 때문에 현상유지 편향에 빠져 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Schweller, 1996). 이처럼 국가의 현상유지 가정이 붕괴될 경우 월츠의 핵억지 논리 자체도 유지될 수 없다. 현상유지국가의 가정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핵균형을 달성하게 하여 안정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상타파국가의 가정에서는 국가들이 핵보유를 통해 기존의 세력균형을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Mearsheimer, 1994/95, 2001; Labs, 1997; Lieber, 2007).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제무정부 구조에서 국가들이 안보를 추구하더라도 상대적 권력의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현상타파국가의 속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국가들은 권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팽창하며, 경쟁국을 압도하기 위해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현상타파적 속성은 팽창에 대한 야심이나 탐욕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팽창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이 팽창하여 자신의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안보불안에서 기인할 수 있다. 야심이나 탐욕이 없는 국가라고 해도 핵무기 보유를 통해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팽창 유인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월츠 역시 국가들이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공격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안보딜레마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Waltz, 1989: 39-52; 이근욱, 2009: 40-42). 결국 핵무기 보유와 핵확산이 반드시 핵균형과 안정성 제고를 가져온다는 월츠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비판받을 수 있다.

## 2. 전쟁 부재 요인: 핵무기 대 양극체제

둘째, 냉전시대 미소간의 전쟁 부재가 핵무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월츠는 강대국 간 전쟁 부재를 통해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곧 강대국의 숫자 혹은 극성(polarity)에 의해 결정된다(Waltz, 1979; 이근욱, 2009: 42-45). 냉전기 미국과 소련사이의 전쟁 부재는 두 강대국에 힘이 집중되어 있는 양극체제 때문이었지 반드시 핵무기 때문은 아닐 수 있다. 월츠의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냉전의 장기적 평화는 핵무기의 존재가 아니더라도 양극체제의 세력균형에 의해 가능했기 때문이다. 월츠는 실제 그의 책에서 강대국 전쟁의 부재가 양극체제의 안정성에서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의 경험들이 보여주듯 다극체제는 동맹국으로 인한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가능성 때문에 전쟁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Snyder, 1984: 461-495). 반면, 양극체제에서는 이러한 연루와 방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 직접적인 공격이 있지 않는 한 전쟁 발생 가능성은 낮아지고 체제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른 한편, 양극체제에서는 다극체제보다 참여하는 국가들이 적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낮아지며 강대국간 전쟁 가능성도 감소할 것이다. 다극체제에서는 다수의 강대국들 사이에 다양한 오해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불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양극체제에서는 다른 중소 국가들의 변화에 큰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전략을 채택하여 체제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핵확산 안정론을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역시 다극체제보다는 양극체제에서 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극성이 가진 전쟁부재 요인이 더 강력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결국 월츠의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 체계에서 미소 냉전의 경험은 핵확산의 안정성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양극체제의 안정성에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핵무기의 확산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극체제는 구조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세계질서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이근욱,

2009: 44-45). 이 경우 월츠의 이론을 따르더라도 핵억지 이론이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핵무기의 존재를 통해 질서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 3. 군사적 충돌의 양상: 강대국 전쟁 대 국지적 무력충돌

셋째, ‘공포의 균형’으로 인해 대규모 핵전쟁의 가능성은 낮을 수 있지만, 낮은 단계 혹은 국지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핵확산으로 인한 지역 분쟁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냉전시기에 미국과 소련 사이 강대국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지적인 전쟁은 만연하였다. 1950년대 한국전쟁,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발생했으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차례 전쟁이 발생했다. 냉전의 중심부인 미소관계는 정치외교적인 갈등이 중심이었지만, 주변부는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지 못했다. 설령 냉전시대 미소간의 강대국 전쟁 부재가 핵무기의 존재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경험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모든 지역이 안정적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중동이나 동북아 등 지역 질서의 차원에서 보면 핵확산의 불안정 요인은 더 크게 보인다. 결국 핵무기가 강대국간 전쟁가능성은 감소시켰을지 몰라도 지역분쟁의 발발과 불안정을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가설이 유효할 수 있다. 월츠 역시 냉전기간 강대국이 개입했던 국지적 지역 분쟁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Waltz, 2002). 최근의 미중관계에서도 전면적인 핵전쟁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한반도나 남중국해 등에서 낮은 단계의 충돌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다 (Goldstein, 2013).

소규모 핵무기 보유국간의 억지와 안정성 역시 비슷한 논리에 의해 설명된다. 가령 냉전기 이스라엘-중동국가나 인도-파키스탄 분쟁은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더라도 무력충돌 자체를 피하지는 못했다. 또한 이들 지역의 안정성은 당사국 간 핵무기 보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질서 및 강대국 관계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었던 측면이 있다. 자신들의 핵억

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중심부 국가들의 관계변화로 인해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이 억지되었기 때문이었다.

#### IV. 북한의 핵 개발 이후 한반도는 더 안정적인가?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을 한반도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논리적, 경험적 비판을 넘어서 북한 핵 개발과정에서 적실성을 가지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월츠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난 뒤 한반도는 더 안정적인 질서로 변했는지의 여부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0여 년 동안 6번의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s state)’의 지위를 주장해 왔다. 북한은 2016년 5차 핵실험이 핵탄두 실험이었고(조선중앙통신, 2016/9/9), 2017년 6차 핵실험은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로동신문, 2017/9/4). 북한은 또한 2017년 11월 29일의 ‘화성 15형’ 시험발사가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 로켓”로 미국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로동신문, 2017/11/29).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대표되는 국제비확산레짐(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는 ‘사실상의(de facto)’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을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질서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성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은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 평가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정책 및 대북정책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이번 장에서는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을 평가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국가성향, 전쟁부재 요인, 군사적 충돌의 양상)을 통해 북한 핵개발의 영향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 북한의 국가성향: 현상유지 대 현상타파

북한의 국가성향은 핵보유 이후 북한의 대외전략과 정책을 이해하는데 큰 실마리를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가성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합리적 혹은 비이성적 국가인지 여부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학계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Kang, 1995; Smith, 2000).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정부는 북한을 비이성적이라 평가하면서 전통적인 핵억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Friedman, 2018). 북한이 현상타파국가인지 현상유지국가인지의 논쟁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황지환, 2012; 우승지, 2013). 북한의 합리성을 전제 한 경우에도 국가성향이 현상유지국가인지 혹은 현상타파국가인지의 여부에 따라 핵보유 이후의 한반도 상황은 다르게 예측될 수 있다. 북한을 현상유지 국가로 가정한다면 월츠의 주장대로 핵보유가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안정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을 현상타파국가로 가정한다면 핵보유를 통해 기존의 한반도 세력균형을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북한에게는 핵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미국의 확장 억지력 무력화가 목표라고 인식하는 것은 북한을 현상타파국가로 전제하는 것이다. 핵개발 이후 북한의 국가성향은 여전히 논쟁적이며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북한의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을 통해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황지환, 2018).

핵개발 이후 북한의 대외전략은 2016년 5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구체화되어 제시되었다(조선중앙통신, 2016/5/9). <표 1>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서’에서 선언된 핵전략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결정서에서 북한은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유지하면서, ‘동방의 핵대국’을 지향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시키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환시키려는 전략을 선언했다. 북한은 “남한 내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철수”시키고, “한미의 전쟁연습을 전면중지”시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핵무기를 통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변화는 북미 간 평화협

〈표 1〉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서’의 핵전략

- 핵무력경제 병진노선 유지
-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 자위적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 ‘동방의 핵대국’ 지향
-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철회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환
- 남한 내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철수
- 남한의 정치 정치군사적 도발과 한미의 전쟁연습을 전면중지
- 대북 적대행위 중단 및 군사분계선상의 심리전 방송과 빠라 살포 중지
-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시키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
- 미국의 선행 사용이 없는 한 핵무기의 선제 불사용
- 핵확산금지외무 이행 및 세계의 비핵화 실현 노력

자료: 조선로동당, 2016.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서” 『조선중앙통신』(5월 9일).

정 체결과 한미 우위의 한반도 세력균형 변경을 의미한다. 7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핵전략은 일부 방어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비핵화 제안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핵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냉전의 종식 이후 지속되어온 한반도 세력균형을 핵실험 이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태로 재편하려는 현상타파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 이후 실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현상타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북한이 대외 핵전략의 관점에서는 현상타파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핵무기를 통해 실제 대외정책을 공격적으로 실행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황지환, 2018). 〈표 2〉는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이 감행한 침투 및 도발을 연대별, 유형별로 요약하고 있다. 북한이 핵능력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에는 이전과 비교하여 침투도발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국지도발은 증가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1990년대 이후 점적해역 도발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점적지역 도발은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의 침투 및 도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볼 때,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핵개발 이후 특별히 공격적이고 현상타파적 정책을 실행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난 이후 한반도가 더 안정적인 상태로 변한 것도 아니다. 그 시기 동안 북한의 점적 해역 도발은 급증하였으며, 특히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2013년의 개성공단 중단, 2015년의 DMZ 북함지뢰

〈표 2〉 북한의 연대별, 유형별 침투 및 국지도발 세부현황

| 구분         | 계             | 1950년대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2010~2016년 |    |
|------------|---------------|--------|--------|--------|--------|--------|--------|------------|----|
| 계          | 3,094         | 405    | 1,340  | 406    | 228    | 222    | 241    | 252        |    |
| 침투<br>도발   | 직접침투          | 1,759  | 381    | 990    | 300    | 38     | 50     | 0          | 0  |
|            | 간접침투          | 179    | 0      | 0      | 0      | 127    | 13     | 16         | 23 |
|            | 월북납북자<br>간접납파 | 39     | 5      | 21     | 11     | 2      | 0      | 0          | 0  |
|            | 소계            | 1,977  | 386    | 1,011  | 311    | 167    | 63     | 16         | 23 |
|            | 국지<br>도발      | 507    | 7      | 300    | 51     | 45     | 51     | 42         | 11 |
| 접적지역<br>도발 | 559           | 2      | 22     | 28     | 12     | 107    | 180    | 208        |    |
| 공중 도발      | 51            | 10     | 7      | 16     | 4      | 1      | 3      | 10         |    |
| 소계         | 1,117         | 19     | 329    | 95     | 61     | 159    | 225    | 229        |    |

출처: 국방부, 2016.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p. 252. 2016년은 11월까지의 자료임.

사건 등 다양한 대남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핵개발이 북한의 정책을 이 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해도 북한이 한반도 질서를 더 안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핵무기가 북한의 국가성향을 현상유지국가의 모습으로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월츠의 주장대로 한반도의 안정성을 제고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다. 북한은 체제 속성상 지난 70여 년 동안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근 대외적 행동이 더 공세적이지 않게 보일 수는 있다. 이전시기와 비교해 핵개발 이후에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기존에 재래식 전력으로 보여주었던 도발과 위협을 유지해 왔다. 또한 현상타파적인 핵전략은 한반도 상황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북한의 정책 역시 현상타파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 2. 한반도 전쟁부재 요인: 핵균형 대 남북한 군사균형

월츠는 냉전시대 핵무기가 미소 간의 ‘공포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방지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논리로 북한의 핵개발도 한반도 핵균형을 통해 남북한 사이의 전쟁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미소간의 전쟁 부재 요인에 대한 핵무기 대 양극체제 간 인과성 논쟁처럼, 한반도의 전쟁부재 요인에 대해서도 핵균형과 남북한 군사균형 사이의 인과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한 것이 2006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의 기간 동안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전쟁 부재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한반도의 전쟁 부재는 북한의 핵개발 이전에도 5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한반도의 전쟁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합의되고 난 이후 60여 년 동안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한반도에 전쟁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오랫동안 작동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1949년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한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점은 미소 간의 확장 핵억제가 한국전쟁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미소 냉전시기 한반도 전쟁 부재가 반드시 핵균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다른 한편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북한이 1차 핵실험에 성공한 2006년까지는 미국의 핵억지만 존재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한 2006년 이후 2018년 현재까지도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핵무기 보유나 확장 핵억제 존재가 전쟁방지에 대한 핵심적 변수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표 3>은 남북한 핵 및 확장핵과 전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

오히려 1953년 이후 한반도의 전쟁 부재는 남북한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혹은 한미의 세력우위(preponderance of power)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한국이 군사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현상타파를 피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한반도의 전쟁부재는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억지력의 작동여

〈표 3〉 남북한 핵/확장핵과 전쟁

| 시기        | 남한 확장핵 유무  | 북한 핵/확장핵 유무 | 전쟁 유무 |
|-----------|------------|-------------|-------|
| 1950~1953 | ○ (미국 확장핵) | ○ (소련 확장핵)  | ○     |
| 1953~1991 | ○ (미국 확장핵) | ○ (소련 확장핵)  | X     |
| 1992~2005 | ○ (미국 확장핵) | X           | X     |
| 2006~2018 | ○ (미국 확장핵) | ○ (북한 핵실험)  | X     |

부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이는 북한의 공세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국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의 대외전략은 분명 한반도에서 현상타파의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에서 현상타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하길 원했다라도 상대적 국력의 취약성이 이를 불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력이 더 월등하고 한미의 군사력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북한의 공세적인 목표는 현실화될 수 없었던 것이다. 특정 국가가 현상타파의 공세적인 의도를 가졌더라도 그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국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실제로는 현상타파국가의 모습으로 행동하지는 못한다(Mearsheimer, 2001).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남한보다 우위였거나 비슷했던 1960년대에 더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유이다. 1960년대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이었으며 북한이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통해 군사력 건설에 전력하고 있던 시기였다(함택영, 1998: 163-177). 결국 1953년 이후 남북한 사이의 전쟁 부재는 북한에 대한 한미의 군사력과 경제력 압도에 의한 억지가 작동했기 때문이다(Kang, 2003). 북한에게는 현상타파 정책의 위험이 이득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 3. 한반도 군사적 충돌의 양상: 전면전 대 국지적 무력충돌

월츠는 냉전기 미소간의 전면적인 핵전쟁은 없었지만, 미소가 개입했던 지역 전쟁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Waltz, 2002).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역시 이러한 지역분쟁에 포함된다. 북한의 핵개발 이후 한반도에서도 핵 억지로 인해 전면전의 가능성은 낮을 수 있지만, 국지적인 무력충돌 가능성

은 여전히 감소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남북한 사이의 전면전은 재개되지 않았지만, 낮은 수준의 국지적 충돌은 지속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증명된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면전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군사적 위기보다는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충돌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위에 제시된 <표 2>를 보면 1960년대에 급증하였던 북한의 직접침투는 1980년대 이후 급감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접적지역에 대한 도발도 최근에는 감소추세에 있다. 반면 최근에는 간접침투가 조금 발생하였고, 접적해역 도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공중 도발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에 집중하고 있었던 1960년대에는 직접침투와 접적지역 도발에 집중했었다. 반면, 핵실험이 본격화되던 2000년 이후에는 전면전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낮은 간접침투와 접적해역 도발 및 공중 도발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황지환, 2018). 이것은 핵개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세력균형이 북한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침투를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하였던 2009년의 대청해전, 2010년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및 2015년의 DMZ 목함지뢰 사건은 이러한 범주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이후 전면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국지적 무력 충돌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한반도 핵균형이 전면전의 억지 가능성을 높인다는 월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해도 남북한 사이의 국지적 무력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높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군사적 충돌의 관점에서 여전히 커다란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200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진행된 6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역시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스라엘-중동국가들이나 인도-파키스탄 분쟁 역시 전면적인 핵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수준의 국지적 무력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한반도에도 큰 함의를 준다.

## V. 결론

이 글은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을 논리적, 경험적으로 재검토하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한반도 질서에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월츠의 지적대로 핵무기가 확산되었을 때 세계질서가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1) 국가성향, 2) 전쟁부재 요인, 3) 군사적 충돌의 양상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살펴보았다. 월츠의 핵심주장은 핵무기의 확산은 더 많은 국가들이 상대국에 대해 더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할 것이므로 세계질서가 더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이 글은 월츠의 주장과는 달리 핵무기의 확산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세계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한반도의 북한 핵개발도 예외가 아님을 밝혔다.

우선 국가성향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합리성을 가정하더라도 현상타파 국가의 경우 논리적으로 핵확산 안정론 논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현상타파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기존의 세력균형을 변경하고 자국에게 유리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들이 공격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안보딜레마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 역시 현상유지국가로 가정한다면 월츠의 주장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을 현상타파국가로 가정하게 되면 북한이 핵보유를 통해 기존의 한반도 세력균형을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자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에서 심각한 안보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현상유지국가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핵역지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냉전시대 미소 간의 전쟁 부재가 핵무기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양국 체제의 구조적 안정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핵확산 안정론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핵무기의 확산으로 다극체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53년 이후 냉전기 한반도의 전쟁 부재가 미소간의 핵균형 때문이라고 증명된 바 없다. 1950년 한국전쟁은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발발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확장억제가 제거되고 난 이후에도 한반도에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핵균형 회복이 전쟁을 방지해 준다는 주장은 논리적, 경험적으로 적실성을 가지기 어렵다. 1953년 이후 60여 년 이상의 시기를 살펴볼 때 한반도 전쟁 부재는 남북한 사이의 세력균형이나 한미의 세력우위를 통한 억지로 설명될 수 있다. 향후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억지력의 작동여부가 한반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공포의 균형’은 핵전쟁 가능성을 감소시켰지만, 낮은 단계의 무력충돌이나 국지전 가능성까지 제거하지는 못했다. 핵무기 확산으로 인해 지역 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되어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 다양한 수준의 무력충돌은 피하지 못했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핵개발 이후 전면전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국지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감소되지 않았다. 전면전으로의 확산가능성이 높은 군사적 위기는 회피될 수 있지만, 위기고조 가능성이 낮은 충돌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 자체가 한반도 불안정을 가속화시키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월츠의 핵확산 안정론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모순이 있다. 한반도에서도 적실성을 가지기 어렵다.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한반도 핵균형을 회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질서가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지는 못했다. 북한의 국가성향, 한반도 전쟁부재 요인, 군사적 충돌의 양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의 핵확산은 안정성 요인보다는 불안정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참고문헌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 라운도. 2010. “핵보유 선언 이후 인도-파키스탄의 갈등해소 노력 고찰.” 『남아시아연구』 제15권, 제3호.
- 우승지. 2013. “북한은 현상유지 국가인가? 김정일 시기 북한의 국가성향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53집 4호.
- 이근욱. 2009.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이란 핵협상 13년 만에 역사적 타결…핵사찰 허용·제재 해제.” 『연합뉴스』 2015년 7월 14일.
- 조선로동당. 2016.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서.” 『조선중앙통신』(5월 9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2017. “성명: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 『로동신문』(11월 29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2016. “성명.” 『조선중앙통신』(9월 9일).
- \_\_\_\_\_. 2017. “성명: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로동신문』(9월 4일).
- 함택영. 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 서울: 법문사.
- 황지환. 2006.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1, 2차 북한 핵 위기의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
- \_\_\_\_\_. 2012.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이론적 의미: 현상타파/현상유지 국가 논의의 재조명.”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 \_\_\_\_\_. 2016.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32권 1호.
- \_\_\_\_\_. 2018. “북한은 핵실험 이후 더 공격적인가?: 현상타파 대외전략과 현상유지 대외정책의 결합.”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1호.
- Adams, Karen Ruth and Kenneth N. Waltz. 1994. “Don’t Worry Too Much Abou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unpublished paper.
- Bell, Mark. 2015. “Beyond Emboldenment: How Acquiring Nuclear Weapons Can Chang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40(1).
- \_\_\_\_\_. 2014. “What Do Nuclear Weapons Offer States? A Theory of State Foreign Policy Response to Nuclear Acquisi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http://ssrn.com/abstract2566293>(검색일: 2017.12.25.).
- Friedman, Uri. 2018. “The World According to H.R. McMaster: Why is he so worried about North Korea?” *The Atlantic*, January 9.
- Gaddis, John Lewis. 1989.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stein, Avery. 2013. "First Things First: The Pressing Danger of Crisis Instability in U.S.-China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37(4).
- Kang, David C. 1995. "Rethinking North Korea." *Asian Survey* 35(3).
- \_\_\_\_\_. 2003.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Second Korean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7(3).
- Kapur, S. Paul. 2007. *Dangerous Deterrent: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d Conflict in South Asia*.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Kroenig, Matthew. 2014. *A Time to Attack: The Looming Iranian Nuclear Threa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Labs, Eric J. 1997. "Beyond Victory: Offensive Realism and the Expansion of War Aims." *Security Studies*, 6(4).
- Landler, Mark and David E. Sanger. 2017. "Trump Disavows Nuclear Deal, but Doesn't Scrap It." *The New York Times*, October 13.
- Lieber, Keir. 2007. "The New History of World War I and What It Mea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32(2).
- Mearsheimer, John J. 1994/95.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ecurity* 19(3).
- \_\_\_\_\_.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Narang, Vipin. 2015.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The Washington Quarterly*, 38(1).
- Paul, T.V. 2000. *Power versus Prudence: Why Nations Forgo Nuclear Weapons*. Montreal: McGill Queen's University Press.
- Sagan, Scott D. 2002. "More Will Be Worse." In Scott D. Sagan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 Sagan, Scott D. and Kenneth N. Waltz. 2002.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 Schweller, Randall. 1994.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1).
- \_\_\_\_\_. 1996. "Neorealism's Status-Quo Bias: What Security Dilemma?" *Security Studies*, 5(3).
- Smith, Hazel. 2000.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76(3).
- Snyder, Glenn H.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_\_\_\_\_. 1981.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Adelphi

Paper 171,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_\_\_\_\_. 1989. "The Origins of War in Neorealist Theory." In Robert Rotberg and Theodone Rabb (eds.),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Nuclear Myths and Political Real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3).
- \_\_\_\_\_. 1995. "Peace, Stability, and Nuclear Weapon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Policy Papers 15.
- \_\_\_\_\_. 2002. "More May Be Better." in Scott D. Sagan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 \_\_\_\_\_. 2012. "Why Iran Should Get the Bomb: Nuclear Balancing Would Mean Stability." *Foreign Affairs*, 91(4).



## Kenneth N. Waltz on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Jihwan Hwang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This paper revisits Kenneth N. Waltz's argument for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n the Korean Peninsula. While Waltz contended tha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have contributed to the stability of world order, this finds that his logic is very problematic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by reviewing the issues of 1) revisionist-status quo power debate, 2) the absence of war, and 3) types of military conflict. This paper also argues that his theory failed in explaining the North Korean case. First, North Korea's revisionist strategy increases the danger of nuclear weapons in Korea. Second, the absence of war in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resulted from the presence of nuclear weapons. Third, there is still a great danger in limited military conflicts in Korea. As opposed to Walt's explanati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has played a de-stabilizing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Waltz, Nuclear Spread, Stability, North Korea, Korean Peninsula

